

글로벌 냉전, 아시아, 그리고 전후일본, 1945~1972

한정선

이번 특집은 ‘전후’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를 ‘글로벌 냉전’이라는 틀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전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의미한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현대를 지칭할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서의 전후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냉전 종식이 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서의 전후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의 장기 전후’(Japan’s long postwa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¹ 일본에서 ‘장기 전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냉전의 해체가 진

한정선(韓程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근현대 일본의 사상사, 문화사 전공. 국문 저서로는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공저, 일조각, 2006)가 있다. 이 저서는 200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일본어로 번역되어 『漫画に描かれた日本帝国』(明石書店)으로 출판되었다. 영문 저서로는 *An Imperial Path to Modernity*(Harvard University Press, 2013)가 있다. 최근에는 현대 일본의 전쟁유적 보존운동을 통해 기억과 역사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Relics of Empire Underground*(2016),” “*The Heritage of Resentment and Shame in Postwar Japan*(2017)”을 발표하였고, 그 외 국문 및 영문 논문 다수가 있다.

1 Harry Harootunian, “Japan’s Long Postwar: The Trick of Memory and the Ruse of History,” Tomiko Yoda and Harry Harootunian eds., *Japan after Japan: Social and Cultural Life from the Recessionary 1990s to the Present*(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현대 일본의 “장기 전후”에 대한 관심은 최근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환기되었는데, 직접적인 계기 중의 하나로 아베 신조 수상을 포함한 보수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전후체제(戦後レジーム) 탈각” 주장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되고 있는 동아시아를 고려한다면 일부 지역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이번 특집에서 강태웅이 인용하고 있는—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의 지적처럼 많은 일본인들이 “냉전’체제’로서 그 시간을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전후일본이 미국에 종속된 채 자유진영에 편입되면서 “냉전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전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일본은 수동적으로 냉전의 이익을 분배받기만 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냉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다. 기존의 냉전에 대한 많은 연구는 미국과 소련 강대국 대립 구도를 통해서 서구 중심으로 분석해 온 측면이 강하다. 이와 같은 서구 중심의 냉전사 또는 냉전의 ‘제1전선’(the first front of Cold War)² 중심의 분석은 냉전을 미국과 소련 사이의 선전포고 없는 총력전으로 보고, 유럽에서 전개된 정치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세력다툼을 서술하고 있다. 냉전의 제1전선의 특징은 ‘장기 평화’(long peace)가 유지된 것이다.³ 그러나 이러한 미소대립으로 만들어진 장기 평화의 냉전은 냉전의 ‘제2전선’을 배제한 것으로 냉전의 전체상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 다른 냉전’이 존재하는 것이다.⁴ 냉전의 제2전선에서는 냉전이 내전, 대리전, 학살이라는 폭력적 과정으로 전개되는 열전 형태를 띠었고, 이러한 폭력이 내재적으로 작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2전선에서는 냉전이 탈식민지 과정과 연동되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즉 신생 독립국가의 탈식민지화를 위한 정치적, 폭력적 투쟁이 냉전 전

서는, 이지원, 「일본의 ‘우경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경제와 사회』 101, (2014). “전후체제” 논의를 일본 정치의 보수화 속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박철희,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10호, 2014, 상반기.

2 Tsuyoshi Hasegawa, “Introduction: East Asia—the Second Significant Front of the Cold War,” Tsuyoshi Hasegawa ed.,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1.

3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4 Heonik Kwon, *The Other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이 책은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2013으로 번역되었다.

개의 중요한 힘으로 작동한 것이다.⁵

이번 특집에서는 제1전선과 제2전선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글로벌 냉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전후일본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탈식민지화를 동력으로 하는 제국 해체 과정이 함께 진행된 제2전선에 위치했으나 열전에 휘말리지 않았고, 제1전선에 속한 패전국 독일과도 달리 분단을 겪지 않았다. 일본이 경험한 냉전과 열전 사이에서의 글로벌 냉전은 전후일본을 어떻게 규정했는가?⁶ 전후일본을 글로벌 냉전이라는 렌즈를 통해 재구성할 경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미소대립의 냉전과 함께 탈식민지화가 폭력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아시아라는 시공간에서 일본의 장기 전후의 기점을 찾을 경우 무엇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으로서 소수민족, 한일관계, 북일관계, 그리고 일본과 비동맹중립국가와의 관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글로벌 냉전은 미소대립 중심으로 재편된 미일관계에 어떻게 개입하였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였나? 그리고 글로벌 냉전 속에서 태동한 전후일본은 현대 아시아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전후일본의 형성기를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부터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시점까지로 한정하여, 글로벌 냉전 속의 일본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에서 글로벌 냉전의 시작은 언제일까? 최덕효는 1948년 4월에 발생한 고베사건의 전후에서 시점을 찾고 있다. 고베사건은 점령기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미점령군의 민족교육 탄압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는 이 사건을 탈식민지 과정과 글로벌 냉전의 접점으로 규정하고, ‘해방민족’ 재일조선인에 대한 미점령군의 탄압 과정을 제1전선에서

5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Immanuel Wallerstein, "What Cold War in Asia? An Interpretative Essay," *The Cold War in Asia: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 Leiden: Brill, 2010. 이외에도 최근의 냉전 연구의 주요 업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특집의 정지희 글, 각주 10번 참조.

6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최근의 냉전사에서도 빠져 있다. 예를 들면, Odd Arne Westad의 최근 연구서, *The Cold War: A World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7에서도 일본의 경우는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나타난 ‘국제인권레짐’ 형성과 연동지어 분석하고 있다.⁷ 기존의 연구가 고베사건을 미소대립이 격화되는 냉전 질서 형성 속에서 일본의 경제 안정화 또는 치안유지 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한 것과 달리, 이 글은 고베사건을 국제사회에서 소수민족(minority) 보호 원칙이 개인 중심의 인권문제로 전환되는 과정과 접목시켜 분석하였다. 고베사건 진압은 ‘흑인부대’인 제24보병연대를 투입하여 이루어졌다. 최덕효는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진압과정의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냉전, 소수민족 배제, 그리고 인종주의가 폭력적으로 교차되는 지점을 재구성하였다.

패전국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열전으로 전환되고 있던 1951년에 일본과 48개 연합국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전후처리가 또 다른 전쟁과 얽히면서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중요한 그러나 간과된 특이점은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를 구축했다는 것이다.⁸ 즉 일본의 아시아 침략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두 개의 중국, 일본제국주의 전쟁의 피해자인 분단된 한반도의 두 정권,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최대 희생자를 낸” 승전국 소련이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제1전선에서 장기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면, 제2전선에서는 분리된 평화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김승배는 일본과 비서명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국교정상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분리된 평화체제’를 재구성하였다. 그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일본과 비서명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가지는 ‘소급 영향력’과 일본이 소련(1956년), 한국(1965년), 그리고 중국

7 ‘국제인권레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규범체제로, 국제연맹 시대의 소수민족 공동체 보호 중심의 규범이 국제연합 시대에 개인 중심의 인권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은 나치 독일이 소수민족 보호주의를 악용한 것에 대한 역사적 교훈 속에서 나타났지만, 동시에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탈식민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재구성된 자유주의 규범체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Mark Mazower, “The Strange Triumph of Human Rights, 1933-1950,” *The Historical Journal*, Vol. 47 No. 2, 2004, 참조.

8 John W. Dower, “The San Francisco System: Past, Present, Future in U.S.-Japan-China Relations,”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2 Issue 8 No. 2, February 24, 2014, p. 3.

(1972년)과 각각 국교정상화를 진행시키는 데 미치는 전후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일본과 이들 국가 간의 영토문제를 불명확하게 하는 ‘소급 영향력’을 통해 패전국 일본을 글로벌 냉전의 ‘자유진영’으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와 평화에 대한 국제적 관념이 결여된 시대정신”이 드러났고, 일본은 “미국의 의향에 반하면서 자주외교를 진행하는 임계점”을 확인하면서 분리된 평화체제를 고착시키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권을 확장해 나갔다.

글로벌 냉전의 분리된 평화체제를 무대로 ‘자주외교의 임계점’을 찾고 있던 패전국 일본은 경제적 자주권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을까? 정진성은 전후일본이 경제적 자주권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서 찾고 있다.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일본은 특별수요(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 특수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발생하였지만, “한국전쟁의 종료, 일본의 독립, 미국 원조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해 가면서 1960년대까지 존재했다.” 한국전쟁 시기에 특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초기에는 섬유 및 직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병기 중심의 ‘신특수’도 확보되었다. 나아가 일본 정부와 경제계는 한국전쟁 휴전 후에도 새로운 특수를 찾고 있었고, 미국의 동남아시아 경제원조정책과 연동지어 ‘바다를 건너’ 발생하는 특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정진성은 특수가 당시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외화 확보에서 찾고 있다. 특수를 통한 외화 확보는 국제수지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수입 증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냈으로써 전후일본의 경제 자립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만들어 낸 분리된 평화 속에서 일본은 경제 성장의 계기를 찾아갔다. 그리고 분리된 평화는 일본과 북한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다른 비서명국가들과는 달리 북일관계는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박정진은 김송배의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비서명국가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일본과

북한은 국가로서 상호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반드시 적대관계는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북일냉전’이 한일 간의 ‘65년 체제’ 성립과정에 미친 영향과 이후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 북일관계의 채널은 일본의 소수민족 재일조선인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인민외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북송사업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집요한 재일조선인 배제 의지와 정책, 일본 내의 재일조선인 단체들과 북한 정부와의 관계 등에서 주요인을 찾는 연구가 있다.⁹ 그러나 박정진은 일본의 북송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을 남북한이 일본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며 체제경쟁을 했던 현실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체제경쟁은 일본이 “한국의 유일 합법성은 인정하되, 북한의 오소리티를 전제하는” 형식으로 분리된 평화에 개입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남북한 체제와 ‘등거리 정책’(equidistance policy)¹⁰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전후처리는 후퇴를 거듭”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글로벌 냉전을 지속시킨 분리된 평화는 일본 내에서 어떻게 정당화되었을까? 정치회에 의하면 “실화 보도와 진상 폭로 전략”을 통한 ‘미일 합작’의 아시아-태평양 전쟁-역사 다시 쓰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미점령 당국이 패전국 일본인을 포섭하기 위해 전쟁 책임을 소수 군부 지도자에게 묻고, 다수 일본인은 이들에게 기만당한 것이라는 ‘태평양전쟁사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회는 이와 같은 진상 폭로를 통한 전후 평화주의 일본 만들기가 미군정에 의한 일방적인 기획이었다기보다는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의해 작동되었음을 1946년에 창간되어 1957년까지 발간된 좌익 계열의 대중 잡지 『진

9 Tessa Morris-Suzuki, *Exodus to North Korea: Shadows from Japan's Cold-War*,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菊地嘉晃, 『北朝鮮帰国事業: 「壯大な拉致」か「追放」か』, 中公新書, 2009 참조.

10 Chong-Sik Lee,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 Stanford: Hoover Institute Press, 1985, pp. 74~80.

상』(真相)을 통해 밝혀 주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하면서, “은폐된 진실”을 폭로하여 전후 역사인식의 재구성을 도모하는 『진상』이 미군정이 시도한 “역사관의 교체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전전과 전후 역사인식의 단절을 기획하면서 시도되는 일본의 평화주의 역사관은 글로벌 냉전과 탈식민주의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반핵평화주의’ 형태로 작동하면서 195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발신되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 간의 경쟁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은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는데, 이 속에서 일본이 발신하는 반핵평화주의는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의 기억을 삭제하면서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담론으로 전략적 가치를 획득하였다. 김지영은 한때 ‘문화전범’으로 지명된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가 자유진영, 공산진영, 그리고 제3세계를 넘나들며 행한 반핵평화주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제국일본이 행한 침략전쟁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일본 내외에서 망각되어졌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비동맹중립노선의 제3세계와 공산주의 진영 국가가 연대하면서 길항하는” 글로벌 냉전의 문화외교 장이었던 아시아제국회의에서 히노의 반핵평화주의가 유통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김지영은 ‘일국 평화주의’라고 종종 지적되어 온 전후일본의 반핵평화주의가 역사적으로 제3세계와의 그리고 제3세계의 개입과 연동되어 형성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강태웅은 일본의 반핵 평화주의가 안으로는 “피해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밖으로는 소련과도 영화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핵문제, 핵전쟁, 그리고 공산진영과의 관계를 그린 이 시기 일본영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그의 글에서 특히 주목되는 영화는 일본이 소련과 합작하여 만든 〈작은 도망자〉(1966)와 〈모스크바 내사랑〉(1974)이다. 공산주의체제 선전영화로도 읽힐 수 있을 정도로 소련이 이상적인 체제로 그려지는 두 영화를 분석하면서, 강태웅은 자유진영 일본과 공산진영 소련 사이의 친밀한 문화 교류는 “유일한 피폭국 일본”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최대 희생자를 낸 소련”이

피해 내셔널리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글로벌 냉전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전후일본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패전, 점령, 제국 해체, 그리고 국가 재건의 다양한 순간을 재구성해 보았다. 7편의 기획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1전선의 장기 평화와 제2전선의 분리된 평화라는 자장 속에서 전후일본은 분열의 틈새와 틈새 사이에 냉전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력 장치를 주체적으로 설정해 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제1전선과 제2전선에 중층적으로 개입하였고, 역사 다시 쓰기와 피해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반핵평화주의를 발신하면서 틈새를 더욱 벌려 갈 수 있었다. 이 속에서 제국 해체에 수반되어야 할 일본 내외에서의 탈식민지 기획은 미완으로 봉합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미완의 탈식민지 기획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장기 전후’를 지속시키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